좌초·무산위기 광주 민간투자사업 줄소송 예고

평동 준공업 지역·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참여업체들 법적 대응 담당공무원 전문성・부서간 조율 없어 민간투자 행정 정비 시급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추진중인 대형 민간투 자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무산위기를 맞으면서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투 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성급 하게 접근한데다 부서간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 없 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간투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대표적인 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사업비가 수천억~수조원대의 초대형 규모로, 민간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비용을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전에 나섰던 사업이 중간에 갑자기 취 소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도 무기한 지연되거나 중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 면서, 관련 민간 투자업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4조원 규모의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내 한류 콘텐츠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엔지니 어링 콘소시엄도 지난 8일 광주시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현대엔 지니어링 콘소시엄측에 구체적 사업 계획을 제출 하지 않았다며 협상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청문 절 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결정 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수개월간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 입해 한류 콘텐츠 조성사업을 준비해 왔는데, 이해 하기 힘든 이유로 협상종료를 통보 받았다"며 "콘 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깊은 논의 끝에 우선협 상대상자 지위 회복 등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 상자인 서진건설과도 소송을 앞두고 있다. 2년여 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온 서진건설측은 여전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 결별은 통보한 상태다. 서진측은 오는 24일

광주시의 청문 절차에 응한 뒤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엔 주민과 협의 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평동 2차산단 내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 에 나섰다가, 거센 반대여론에 밀려 소각장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매립만 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폐기물 관련법률에 따라 소각장 설치 는 적법하다며 민간사업자와 668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으나 결국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광주시의 소각장 설 치 취소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평동산단 인근 주민의 불만은 여전하다. 주민들은 이날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결의문을 내고 "소각장을 없애는 것은 당연하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도 반대한 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한국 정책대상' 정책상 광주형일자리·AI 조성 등 인정

광주시는 9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 10회 한국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 문 정책상을 받았다.

정부 지정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 터스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MOM) 편한 광주 만들기 등 시책을 높이 평가받 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떠나는 광주에서 청년이 찾아오 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도전했다"며 "변 화와 혁신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 운 광주 미래 등 결실로 이어지도록 매진하겠다"고

이 상은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와 기관장 리더 십을 공유하려고 2010년부터 한국 정책학회 주 관으로 수여된다. 광주시는 2018년 제7회 한국 정책대상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협치 행 정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 부문 대상을 받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년 광주에 AI 교통체계 도입

지능형교통체계 보조사업 선정 34개 지자체 133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내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로 광주시와 경기 도, 제주도 등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ITS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 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각종 단말기로 보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 하다.

지난 7월 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대상지 공모에 는 4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 데 광주시 등 광역 지자체 5곳, 기초 지자체 29곳

또 지난해 이미 대상지로 선정돼 2개년 사업을 추진 중인 27개 지자체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등 총 133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신호체계 서비스를 선보인다.

광주시는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인 도시부 10개 교차로에 AI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교통상 황을 관제하고 차량흐름을 분산시키는 스마트교차 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 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지원할 예정 이다.

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분기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340개 업체 참여 '광주 에이스 페어' 개막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전시회 '2021 광주 에이스 페어'가 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를 주제로 12일까지 열

리는 이번 행사에는 340여개의 문화콘텐츠 라이선싱 업체가 참가해 440여개 전시 부스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 광주 아이키움 손 맞잡다

광주시-지역 산후조리원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협약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지역 산후조리원이 '광주형 산후관리

광주시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종효 행정 부시장과 김옥선 더블유산후조리원 간호실장, 김 혜자 모아산후조리원 원장, 동종선 미즈피아산후 조리원 원장, 박경아 빛고을산후조리원 간호과장, 박윤희 에덴병원산후조리원 간호부장 등 각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 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산모·신생아를 위한 공적서 비스 기반 구축 및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협력 증진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 ▲생애주기 별 지원정책 대시민 홍보 ▲통합정보 플랫폼 '광주 아이키움' 공유·활용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민선 7기 핵심 정 책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만들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7월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

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만 남·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 균형 등 6단 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

이용섭 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 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 로 돌렸던 우리 광주에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며 "광주시 출산장 려 정책의 확산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 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전남도, 15일까지 모집

전남도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21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모 집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2년 이상(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정상 가동중인 기업 중 최근 1년간 신 규 일자리 증가규모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의 경우 5%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증가인원 5명) 이상 ▲종업원 50 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기한은 15일까지로,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일자리업무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 또는 소재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청년근로자 증가, 고용유지율, 기업경 영, 근로조건 등 15개 항목을 서류·현지심사해 최 종 20개 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환경개 선자금 2000만원과 함께 인증서, 인증패를 수여한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 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

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최정운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코 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노력 한 우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 안전

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